



초등생 자살 시도… 교육당국 부실대응 ‘도마’

제주도의회 교육위 교육당국 현안보고서 사안 점검
서면 보고 누락… 초기 대응·후속조치 미흡 등 질타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자살 시도에도 교육당국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부실대응 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동우)는 24일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받고 상황 발생 이후 대응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 사건은 올해 4월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 학생의 부모 측은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이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지난 6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남은 공식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없었고, 학교폭력 이후 학생 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 적절성 등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와 함께 도교육청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또 위기 상황 발생 이후 학생 보호와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놓고 교육당국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의 자살 시도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기관 보고 과정에서



2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개최했다.

유선 보고만 이뤄지고, 문서 보고로는 이어지지 않는 등 후속조치에 따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윤철훈 교육국장은 “유선보고 이후 서면보고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 학교

교육 정상화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 국장은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의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정부, 4·3 피해보상금 반복적 변칙 운용 ‘빈축’

지난 4년간 1276억 재난복구비·인건비 등 타 사업에 이용
문대림 “피해보상금 ‘썸짓돈’ 아닌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

정부가 제주4·3 피해보상금을 재난 복구비나 인건비 등으로 반복적으로 타 사업에 이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4·3 피해보상금의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을 지적하고, 제주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4·3 피해보상금 가운데 총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됐다.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에서 충당했다.

문 의원은 “제주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썸짓돈’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이용은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문 의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집행액이 2022년 281억원에서 2025년 1084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법무부가 2025년 본예산에 420억원만 편성한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다른 사업

에서 425억원을 이·전용하고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건을 더 면밀히 분석해 과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행안부는 남은 피해보상금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법무부는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오는 것이 제주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모습이나”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의 간절한 소망이 행정절차 지연과 반복적인 변칙 예산 운용으로 다시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원기자 bu8385@ihalla.com

HPV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12세 남성 청소년 포함

사람 유두 종 바이러스(HPV·Human Papillomavirus)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HPV 예방접종은 12~17세 여성 청소년(2008~2014년생)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2007년생)을 대상으로 지원돼 왔다.

올해부터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제주지역 남성 청소년 접종 대상자는 약 3500명(2026년 8월 기준)에 이른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과 항문암 등을 예방한다.

HPV 감염으로 생기는 자궁경부암의 90% 이상, 생식기 사마귀의 89% 이상, 항문 상피 내 종양의 78% 이상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문대림에서

혈세 받는 공적 단체, 선거판 들러리 안돼

선거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특히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과 단체라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을 받는 만큼 선거 앞에서는 한층 신중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이나, 기관과 단체의 이름과 조직력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도내 주요 공적 단체들은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이러한 조직의 영향력이 특정 후보나 정치 세력을 돕는 데 쓰인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다.

더 무거운 정치적 중립 의무
행정, 명확한 기준 세우고
위반시 단호한 책임 물어야

무엇보다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 행태부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이른바 ‘선거공신’에게 보은성으로 기관의 주요 직책을 챙겨주거나, 이들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개입하는 구태는 반드시 끊어야 할 악습이다. 정치인이 앞장서서 공적 단체를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줄 세우기를 강요한다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단일한 태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선거철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됨에도 문제가 터진 뒤에야 수수하거나 해당 단체의 몫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 행정이 수수방관한다면 잘못된 관행은 끊어낼 수 없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이지



한 동 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관리·감독이 아니다. 선거 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다.

위반 시 책임을 묻는 기준 역시 엄격해야 한다. 부당한 선거 개입이 확인될 경우,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조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차년도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도민의 세금 은 맹목적인 눈먼 돈이 아니다. 공적 목적에 맞게 쓰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원칙을 어겨도 제재가 없다면 어떤 규범도 힘을 잃고 만다.

이는 결코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옥죄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조직과 구성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에 집중하게 하려는 조치다. 각 단체는 본연의 역할과 도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도민과 회의를 바라볼 때 그 존재 이유도 선명해진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더 이상 관망선 안 된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어겼다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각 기관과 단체도 정치적 논란을 털어내고 도민 신뢰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